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12.(화) 16:00
(지 면) 2026. 5.13.(수) 조간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 관계기관 합동,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발표
- 고령층 등 취약자 1:1 대피 지원, 주민대피 알림에 민방위 사이렌도 동원
- 폭염 중대경보 도입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 안전관리 철저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추세인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한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과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 풍수해 주요 대책

1.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위험 기상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관계기관이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위험상황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등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한다.

2. 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448개소 늘어난 총 9,412개소를 관리한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해,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개소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유수 흐름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6월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해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을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으로 상향했으며,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 역시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2조 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3. 3대 유형 집중 안전관리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 지정(3만 4천여 개소)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등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 대피와 안전 확인 이후 복구 등 주민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 정보 ‘심각’ 발령 시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로 알리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cm를 초과할 경우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통제 상황과 함께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4.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일상회복 지원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를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만 4천여 명으로 확대 관리하고, 이들의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 또한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야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 호우·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희망 지역 대상으로 시범운영

재난 이후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시설(1만 5천여 개소)과 응급·취사 구호세트(5만 1천여 개)를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 폭염 주요 대책

1.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폭염 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4.15.)하고, 대응체계 정비와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해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을 지원한다.

2.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폭염 취약대상을 3대 분야(신체적·경제적·사회적)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어르신을 대상으로 특보 시에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지원(280억 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적극 안내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3. 인프라 구축·운영

무더위쉼터는 민·관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영역을 넓히고, 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1,318억 원)와, 조류 소동강화 그물,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조치하고, 안전을 위해 소규모 석축·옹벽,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제안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풍수해 총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
담당 부서 <폭염 총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과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872)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책임자	단 장	이성민	(044-202-2650)
		담당자	사무관	임화영	(044-202-2651)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최재웅	(044-201-7651)
		담당자	사무관	함지범	(044-201-7652)
		담당자	사무관	양동춘	(044-201-6638)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책임자	기획관	이경진	(044-201-3311)
		담당자	사무관	황영용	(044-201-4570)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51-773-5610)
		담당자	사무관	전영호	(051-773-5616)
담당 부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책임자	과 장	정종우	(042-481-4270)
		담당자	사무관	박봉관	(042-481-8844)
담당 부서	기상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담당자	전문관	이제광	(02-2181-0495)